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28

1.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 1965년 「한일기본협약」 체결 시 별도로 체결된 문서로, 한일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함.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 2006. 4. 18. 우리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고 이를 국제연합에 기탁함으로써, 협약 제286조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강제절차 회부에서 벗어남.
- ※ 1994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286조(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규정이 있었음.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 목 차 ||

1. 개요	1
2.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4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6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관련조문)	8
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관련조문)	16

1. 개요

최근 독도와 관련한 일본국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움직임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강제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관련 조약과 국제규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선 먼저 1965년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분쟁에 관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그리고 2006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한 강제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이 있음.

가. 입법현안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2건 계류 중

※ 2012. 8. 17. 정문헌의원 등 15인, 2012. 8. 2. 심재권의원 등 128인

나.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 1965년 한일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국은 독도에 관한 사항도 한일 기본협약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이하 “교환공문”)이라는 형태로 별도로 독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교환공문에서 독도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일본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교환공문은 양국 간의 어떠한 분쟁도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체결됨.¹⁾

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 1994. 11. 16.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 제286조는 국제해양협약 당사자국 간의 분쟁이 국제연합(UN)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강제회부 된다고 규정함.
- 이에 2006. 4. 18. 우리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고 이를 국제연합에 기탁함으로써, 협약 제286조에 따른 강제절차에서 벗어나고, 협약 제29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국인 우리 정부와 일본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위 선언은 협약 제29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국과 관계없이 우리정부의 선언만으로 협약 제286조에 따른 강제절차에서 벗어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며, 협약 제29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선언이었음.

1) 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성안당, 2010, 269쪽 참조.

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 1991. 9. 18. 우리나라에 발효되었지만,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동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

2.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조약 제183호, 발효일 1965. 12. 18.]

-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함.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본관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본관은 또한 각하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할 것을 희망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 서한)

(번역문)

1965년 6월 22일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서한)....."

본 대신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원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2년 8월 20일 방문)]

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효일 2006. 4. 18. 다자조약, 제1776호, 2006. 4. 24.]

- 1994. 11. 16. 대한민국에서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국제해양 협약”)」 제286조는 국제해양협약 당사자국 간의 분쟁이 국제연합 (UN)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 분쟁 당사자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강제회부 된다고 규정함.
- 그러나 2006. 4. 18.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획정, 주권·관할권 행사 또는 해양과학조사·어업 관한 법집행,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등에 관하여 국제사법 재판소(ICJ) 등의 강제회부를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를 국제 연합에 기탁함.
- 이는 협약 제298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정부의 선언만으로 협약 제286조에 따른 강제절차에서 벗어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며, 협약 제29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선언이었음.

국 문	영 문
<p>2006년 4월 18일, 서울</p> <p>각하,</p> <p>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98조에 따라 선언을 하게 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p> <p>또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상기 선언의 세부 사항을 통보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p> <p>1. 대한민국은 협약 제298조제1항에 따라 협약 제298조제1항 (a)호·(b)호 및 (c)호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분쟁에 관하여 협약 제15부제2절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p> <p>2. 현재의 선언은 즉시 유효하다.</p> <p>3. 현재 선언의 어느 부분도 대한민국이 다른 당사국간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이 동 협약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에 소송 참가 허가를 요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Seoul, 18 April 2006</p> <p>Your Excellency,</p> <p>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ke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Convention").</p> <p>I have further the honour to notify you of the afore-mentioned declaration, the details of which are as follows:</p> <p>"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p> <p>2.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be effective immediately.</p> <p>3. Nothing in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bmit a request to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of any dispute between</p>

국 문	영 문
<p>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포함 니다.</p> <p>반 기 문 외교통상부장관</p> <p>뉴욕, 국제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 귀하</p>	<p>other States Parties, should it consider that it has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at dispute.“</p> <p>Please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p> <p>Ban Ki-moon Minister</p> <p>His Excellency Kofi A. Annan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p>

[국문 및 영문: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청구기호 L 341.026 ○356ㄴ v.19p.1) 대한민국조약집
 다자조약 제19권 Vol. I(2006), 외교통상부, 427~429쪽]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효일 1994.

11. 16. 다자조약, 제1328호]

원 문	번 역 문
SECTION 2.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Article 286 Application of procedures under this section Subject to section 3,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where no settlement has been reached by recourse to section 1, be submitted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to the court or tribunal having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제286조 이 절에 따른 절차의 적용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1절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3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절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Article 287 Choice of procedure	제287조 절차의 선택
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

원 문	번 역 문
<p>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p> <p>(b)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p> <p>(c)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p> <p>(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for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therein.</p> <p>2.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affect or be affected by the obligation of a State Party to accept the jurisdiction of the Sea-Bed Dispute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the extent an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t XI, section 5.</p> <p>3. A State Party, which is a party to a dispute not covered by a declaration in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VII.</p> <p>4. If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 accepted the sam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it may be submitted only to that procedur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p> <p>5. If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p>	<p>양법재판소</p> <p>(b) 국제사법재판소</p> <p>(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p> <p>(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p> <p>2. 제1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제11부 제5절에 규정된 범위와 방식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3. 유효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p> <p>4.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p> <p>5.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p>

원 문	번 역 문
not accepted the sam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it may be submitted only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
6. A declaration made under paragraph 1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ree months after notice of revocation has been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6. 제1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취소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7. A new declaration, a notice of revocation or the expiry of a declaration does not in any way affect proceedings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having jurisdiction under this articl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7. 새로운 선언, 선언의 취소 또는 종료의 통고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8. Declarations and notic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States Parties.	8. 이 조에 언급된 선언과 통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Article 298 Optional exceptions to applicability of section 2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section 1, declare in	1. 국가는 제1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2절에

원 문	번 역 문
<p>writing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ne or mor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with resp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f disputes:</p> <p>(a) (i)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s 15, 74 and 83 relating to sea boundary delimitations, or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provided that a State having made such a declaration shall, when such a dispute arises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where no agreeme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s reached in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accept submission of the matter to conciliation under Annex V, section 2; and provided further that any dispute that necessarily involves the concurrent consideration of any unsettled dispute concerning sovereignty or other rights over continental or insular land territory shall be excluded from such submission;</p> <p>(ii) after the conciliation commission has presented its report, which shall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the parties shall negotiate an agreement</p>	<p>규정된 절차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 선언할 수 있다.</p> <p>(a) (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p> <p>(ii) 조정위원회가 보고서(그 근거가 되는 이유 명시)를 제출한 후, 당사자는 이러한 보고서를 기초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교섭한다. 교섭이 합</p>

원 문	번 역 문
on the basis of that report; if these negotiations do not result in an agreement, the parties shall, by mutual consent, submit the question to on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 동의에 의해 제2절에 규정된 어느 한 절차에 그 문제를 회부한다.
(iii) this subparagraph does not apply to any sea boundary dispute finally settled by an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or to any such dispute which is to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binding upon those parties;	(iii) 이 호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중국적으로 해결된 해양경계분쟁,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어떠한 해양경계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disputes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military activities by government vessels and aircraft engaged in non-commercial service, and disputes concern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in regard to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r tribunal under article 297, paragraph 2 or 3;	(b) 군사활동(비상업용 업무를 수행 중인 정부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군사활동 포함)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29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c) disputes in respect of which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s exercising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less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to remove the matter from its agenda or calls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원 문	번 역 문
upon the parties to settle it by the mean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리하지 아니하다.
2.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may at any time withdraw it, or agree to submit a dispute excluded by such declaration to any procedure specified in this Convention.	2.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선언에 따라 제외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entitled to submit any dispute falling within the excepted category of disputes to any procedure in this Convention as against another State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at party.	3.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분쟁으로서 제외된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그 다른 당사국의 동의없이 이 협약의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4. If one of the States Parties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a), any other State Party may submit any dispute falling within an excepted category against the declarant party to the procedure specified in such declaration.	4. 어느 한 당사국이 제1항 (a)에 따라 선언을 행한 경우, 다른 모든 당사국은 제외된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선언당사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선언에 명시된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5. A new declaration, or the withdrawal of a declaration, does not in any way affect proceedings pending before a court or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5. 새로운 선언이나 선언의 철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계류 중인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6. Declarations and notices of withdrawal of declarations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posited with	6. 이 조에 따라 행한 선언이나 그 철회의 통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당사

원 문	번 역 문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States Parties.	국에게 그 사본을 전달한다.
Article 299 Right of the parties to agree upon a procedure	제299조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
1. A dispute excluded under article 297 or excepted by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298 from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may be submitted to such procedures onl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1. 제297조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298조에 따른 선언으로 제2절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로부터 제외된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만 이러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2. Nothing in this section impairs the righ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agree to some other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such dispute or to reach an amicable settlement.	2.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에 합의하거나 우호적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원문 및 번역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2년 8월 20일 방문)]

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Sta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6. 26., 발효 1991. 9. 18. 조약 제1059호]

-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재판 상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동의가 필요함.

원 문	번 역 문
Article 36 1.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omprises all cases which the parties refer to it and all matter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r in treaties and conventions in force.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may at any time declare that they recognize as compulsory ipso facto and without special agreement, in relation to any other state accepting the same obligatio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ll legal disputes concerning:	제36조 1.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원 문	번 역 문
<p>a.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p> <p>b. any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p> <p>c. the existence of any fact which, if established,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p> <p>d. the nature or extent of the reparation to be mad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p> <p>3. The declarations referred to above may be made unconditionally or on condition of reciprocity on the part of several or certain states, or for a certain time.</p> <p>4.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parties to the Statute and to the Registrar of the Court.</p> <p>5.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36 of the Statut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which are still in force shall be deemed,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present Statute, to be acceptances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the period which they still have to run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p>	<p>가. 조약의 해석</p> <p>나. 국제법상의 문제</p> <p>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p> <p>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p> <p>3.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으로, 수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p> <p>4. 그러한 선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재판소규정의 당사국과 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한다.</p> <p>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은,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사이에서는, 이 선언이 금후 존속하여야 할 기간동안 그리고 이 선언의 조건에 따라 재판소의 강제적 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p>

원 문	번 역 문
6. In the event of a dispute as to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the matter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6.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원문 및 번역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2년 8월 20일 방문)]

※ 이 자료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현안 법률정보」 관련 문의 □			
부 서 명	구 분	이 름	전화번호
법률정보실 법률자료과	과 장	최 경 숙	4060
	법률자료조사관	조 동 관	4768